■ 광주시·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광주시와 전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농업법인 관리 소홀, 경지면적 감소, 해외 지자체 공무원 교류, 광주천 송수관로 공사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부실·도산 농업법인 자금 회수 대책 있나"

"광주천 송수관로 매설에 잡토 사용 의혹"

◇**농업법인 10곳 중 1곳 도산**=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황병순(민주·보성1) 의원은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5년 말 현재 정부지원 법인 466개 가운데 도산(倒産) 등 부실운영 법인이 전체의 9.9%인 46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들 도산법인 46곳에 대한 정부지원금 99억5천900만원 가운데 미회수액이 84.5%인 84억1천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원금 미회수는 막대한 국고 손실로 이어지며, 이는 전남도가 충분한 심사 없이 지원한데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자금 회수 및 경영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전남도내 농업법인은 2006년 말 현재 영농조합법인 1천95개, 농업회사법인 122개 등 총 1천217개로 영업손실·장기휴폐업 등에 따라 전년도의 2천8개(영농조합법인 1천820개, 농업회사법인 188개)보다 무려 791개(39.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실 농업법인을 정리하다보니 감소 법인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농지면적 급속 감소 식량안보 위협**=전남도의회 김석원(민주·해남1) 의원은 이날 "2005년 현재 농지면적은 32만3천645ha로 지난 2001년보다 6천616ha 줄어 연평균 1천654ha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남권 개발에 따른 막대한 농지 전용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수요에 따른 농지감소로 식량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크다"며 "진흥지역 보존을 위해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경지정리율이 90%를 넘는 곳은 10개에 불과하고 경지정리가 완료된 면적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률도 45.1%에 그치는 등 전남 주요 농업 사업 진척율이 목표에 비해 저조해 농업발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는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의 진도율은 3%, 1994년 시작돼 오는 2010년 완료 예정인 '저수지 준설사업'도 30%에 그쳤다.

◇**해외 지자체 공무원 교류 실효(失效)**=전남도의회 이종헌(민주·강진2) 의원은 "전남도 경제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지자체와 공무원 교류사업이 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6년 이후 일본, 중국 자치단체와 교류 근무한 공무원 28명 중 단 한 명만 해당 경제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관한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 당초 교류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천 송수관로 부실시공 의혹"**=광주시의회 손재홍(민주·동구2) 의원은 광주시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원지교~녹동교(길이 2.7㎞) 간 송수관로 공사가 시방서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부실시공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시공지침에 따르면 터파기와 관로매설 후 되메우기 과정에서 자갈이나 암석 등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도 자갈이나 암석 등이 섞인 잡토를 그대로 사용해 송수관로 녹방지페인트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시방기준은 터파기를 한 흙에서 지름 10㎝ 이상의 돌이나 자갈 등을 골라낸 뒤 되메우도록 돼 있다"며 "현재까지 조사결과 부실시공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제정 추진 '눈에 띄는' 조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올 2차 정례회에서는 주민 권익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국제화촉진·국제교류협력 조례안**=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민주·동구2) 등 4명의 의원이 전국에서 처음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광주시의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내실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종 국제대회와 회의, 행사 등의 유치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와 외국인의 방문 및 체류여건 조성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체류형 숙박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광주시 국제교류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문화예술인·경제인 단체 등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관리 및 조정 조례안**=광주시의 주요 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관리하고 조정·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김남일(민주·비례)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해가 상충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큰 시책은 정책 결정에 앞서 '갈등영향분석'을 하도록 했다.

영향분석에는 공공시책의 기대효과, 이해 관계인 의견조사, 갈등 유발요인, 예방 계획 등을 담아야 하며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구성, 이를 심의토록 했다.

◇**향토음식 육성·지원 조례안**=광주시의회 이명자(신당·비례) 의원 등 4명이 발의했으며 지역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여 음식문화 발전과 관광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향토대표음식 지정 ▲향토음식연구원 설립 ▲명인·명가 선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전남도의회 송대수(민주·여수2)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육성하고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례적인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체육시설 이용료 등 감면 확대**=광주시 지역연고 프로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요율을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고,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장의 자녀에게도 체육시설 이용료의 20%를 감면해주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우크라이나 최악 광산 사고…65명 사망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에서 640km 떨어진 도네츠크주 자샤드코 광산 지하 1천m 아래에 있는 갱도에서 18일 새벽 3시(현지시각) 가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65명이 숨지고 35명이 실종되는 사상 최악의 광산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에 앞서 지도를 펼쳐든 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도네츠크이터=연합뉴스

미얀마 군정 유혈 진압사태 집중 성토

오늘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싱가포르에서 20~21일 열리는 제13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연례 정상회의에서는 미얀마 사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은 20일 열릴 공식 회의에서 지역 공동체의 헌법 구실을 하게 될 역사적인 '아세안 헌장'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국제사회는 이보다도 미얀마 사태에 대해 아세안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 정상들은 국제사회의 압력을 의식, 19일 밤 테인 세인 미얀마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비공식적인 만찬회장에서 평화 시위에 대한 미얀마 군정의 유혈 진압사태를 집중 성토할 예정이다.

조지 여 싱가포르 외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세안 정상은 미얀마 군정의 폭력적인 평화시위 진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테인 세인 총리는 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미얀마를 두 차례 방문했던 이브라힘 감바리 유엔특사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열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감바리 특사의 미얀마 사태 브리핑은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가 개인적으로 그를 초청해 이루어졌다.

여 장관은 감바리 특사의 초청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 공통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미얀마의 국가화해를 위해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세안은 미얀마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을 전망이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경제 제재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얀마 군정 지도자들의 기세를 꺾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옹 켕 용 아세안 사무총장 역시 미국 상원이 요구한 미얀마의 아세안 회원국 자격정지에 대해 "대립은 해결책이 아니다"며 이를 거부했다. 미얀마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역시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對) 미얀마 제재조치를 반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연합뉴스

北, 불법 금융활동·국제금융체제 편입 논의

북·미, 뉴욕서 금융실무회의

북미간의 금융관계 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금융실무회의가 19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뉴욕의 미국 대표부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달러화 위폐 제조 등 북한의 기존 불법 금융활동 근절과 향후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편입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북미 금융실무회의는 방코델타아시아 문제 해결과정에서 만들어진 협의체로 북한 금융인들의 미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북측은 BDA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미 금융기관들의 협조와 함께 국제금융 거래의 정상화를 보장받는데 주력하는 반면, 미국은 달러화 위조 등 북한의 각종 불법 금융활동을 중단시키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또한 북한이 BDA 해결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노출한 점을 감안,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개발은행) 등 국제금융체제에 편입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론에 대해서도 미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무엇보다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고 대 적성국교역법이 종료돼야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이들 문제를 중점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뉴욕=연합뉴스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사망자 최대 1만명 달할 듯

최대 시속 250㎞의 강풍과 폭우로 방글라데시를 강타한 초강력 사이클론 '시드르(Sidr)'에 의한 사망자 수가 5천~1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방글라데시 적신월사의 아브두르 라브 회장이 18일 밝혔다.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는 18일 저녁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가 2천200명이라고 밝혔으나 통신두절 등으로 집계가 되지 않은 지역의 피해와 실종 상태인 수백 척에 타고 있던 어부 1천여명 등을 감안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ATN방글라 TV 등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다카AFP=연합뉴스